

# 2025년 2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안지연	2/2	[토요와이드]탄핵 정국 속 늘어난 불법 현수막...날짜 고치는 꿈 수도 [와이드11]"연중무휴 빠른 배송한다"...주 7일 배송 확산	
최미연	2/9	[뉴스특보]이진우·여인형 증인 신문...尹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뉴스특보]'현재 출석' 이진우, 제한적 답변..."계엄 적법하다 생각"	
임윤주	2/16	[일요와이드]잇따른 선박 사고..."안전관리 미흡·고령화 등 원인" [뉴스투나잇]정보 수집하고 불리한 건 침묵...딥시크 신뢰 주의보	
안지연	2/23	[뉴스투나잇]인천 송도 패아닌 분구 논란..."현실성 없어" vs "주민 원해" [토요와이드]목사방까지 나왔는데...성착취물 삭제인력 증원은 '제동'	

##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2023. 01. 31	임기연장 27.1.31까지
활동	최미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 07. 25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5 2/2(일)	안지연	<p>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줄어들었던 정당 현수막이 최근에는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토요와이드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최근 거리 곳곳에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의 증가와 그 문제점을 짚어 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현수막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으로 지속되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깊어지는 정치적 갈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보도는 불법 현수막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전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표시 기간을 임의로 수정하는 등 편법 사례 등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의 허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보도는 서울시의 도시경관 담당자의 말을 통해 규정에 어긋난 현수막에 대한 설명을 전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추가적으로 다뤘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보도는 정당의 규정 위반 현수막 게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당에서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실태 파악 여부와 규정</p>	<p>후속 취재로 제도 개선 방안이나 그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 다뤄보겠습니다.</p>

		<p>위반의 이유 등 정당의 입장이나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p>	
2025 2/9(일)	최미연	<p>지난 4일 연합뉴스 TV는 탄핵심판 5차 변론을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홍장원 전 차장은 비상계엄 발표를 통해 발령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국정원 내부와 국방부 차관에게도 확인했지만 누구도 관련 정보를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종료 후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계엄 관련 지시를 부인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으나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엄모의나 계획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의 계획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지호 청장에게 체포 명단을 알려주며 위치 파악을 요청했으나 기억은 일부 다르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설명하면서도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p>	<p>현재 재판이 길고 또 집중적으로 이뤄져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사실 나온 발언 위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기사가 많습니다. 가능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보도를 검토해보겠습니다.</p>

		<p>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며, 주요 증인들의 진술과 대통령의 반박을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법적 책임과 명령 이행의 불가피성, 계엄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권력의 행사와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사건의 전개나 핵심 쟁점에 미치는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법적 쟁점에 대한 보다 심층적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독자에게 더 명확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p>	
2025 2/16(일)	임윤주	<p>다음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도한 &lt;뉴스 투나잇&gt; 살펴보겠습니다. 25개월 된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인에게도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먹이고, 소주를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이가 친부모의 아동학대</p>	<p>가해 부모의 아동학대 내용을 부각, 강조시키는 과정에서 기사 제목이 다소 선정적으로 작성됐습니다. 잔혹한 범죄를 알려 사회의 경각심을 알리되, 자극적인 제목은 삼가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p>

		<p>로 사망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보도에서 알 수 있듯, 친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사망이었으나, 제목이 다소 자극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이는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방치된 후 사망하였으나, 제목에서는 불닭소스와 소주를 먹여서 사망한 것처럼 기재되었습니다. 학대 과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실임은 분명하나, 단신 보도인 만큼 보다 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p>	
2025 2/23(일)	안지연	<p>인천의 송도국제도시 분구론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송도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송도를 연수구에서 분리해 특별자치구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약이 쏟아졌는데, 최근 이를 두고 기초자치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이 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송도국제도시 분구 문제를 놓고 지역 정치인 간의 갈등 상황을 전했는데,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지역 사회의 현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다뤄 시청자들이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는 지역 정치인의 갈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구청장의 주장</p>	<p>주민들의 입장이 담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후속 보도로 추진해보겠습니다.</p>

	<p>과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행정구역 실무편람 등의 자료를 통해 현실성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분석이 다소 부족해 시청자들이 분구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정치인 외에도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덧붙였다면 이 사안을 더욱 깊이있게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더욱 분석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담은 내용을 제공해주길 바랍니다.</p>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5. 02. 02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8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탄핵 정국이 격화되면서 극단적인 진영의 논리와 비방이 담긴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줄어들었던 정당 현수막이 최근에는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시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토요와이드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최근 거리 곳곳에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의 증가와 그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현수막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으로 지속되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깊어지는 정치적 갈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도는 표시 기간을 빈 칸으로 두거나, 표시 기간이 끝난 뒤 철거하지 않는 등의 규제를 어긴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주목했는데요,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읍면동에 최대 2개만 허용하고 있지만 마포구 공덕동에서는 이를 위반한 똑같은 정당의 현수막이 최소 4개가 발견되었고, 현수막을 몰래 고쳐쓰는 꼼수도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보도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피로감을 보이는 시민들의 의견과 서울시 도시경관 담당자의 규제 위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탄핵 정국 속에서 증가한 불법 정당 현수막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는 없고 서로에 대한 자극적인 비난이 난무해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보

도는 불법 현수막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전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표시 기간을 임의로 수정하는 등 편법 사례 등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의 허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보도는 서울시의 도시경관 담당자의 말을 통해 규정에 어긋난 현수막에 대한 설명을 전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추가적으로 다뤘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보도는 정당의 규정 위반 현수막 게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당에서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실태 파악 여부와 규정 위반의 이유 등 정당의 입장이나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통업계의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소비 추세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유통업계의 택배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택배 업체마다 차별화가 전략이 중요해지면서 당일배송이나 새벽배송 등 더 빠른 배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휴일 없는 택배사의 주 7일 배송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 7일,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택배 배송을 시작한 택배사로 인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제휴를 맺고 주말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는 주 7일 배송으로 소비자들의 생활 편의와 온라인 판매자의 연 70일 이상 판매일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한 택배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쿠팡과 경쟁 구도를 보이는 이커머스 업계의 배송 경쟁의 심화와 신선식품의 주말 배송이 가능해져 홈쇼핑과 식품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에 대한 편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 7일 배송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의 설명도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유통업계의 주 7일 배송 확산 현상을 다뤘습니다.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증가하고 온라인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을 전하며 주 7일 배송으로 인한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배송 서비스 확대를 강조하기 위해 주 7일 배송의 의미와 업계 동향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배송 서비스 확대에 대한 한쪽 입장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환영하는 입장도 있으나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입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실제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 기사는 배송 서비스 확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등 다양한 시각이 포함되었다면 보다 균형 잡힌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택배 기사들의 근무형태 개선 등 구체적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다양한 입장을 둘러볼 수 있는 내용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금연 정책과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지만 흡연율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자담배 사용 증가가 흡연

올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문가들은 흡연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뉴스오늘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흡연율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남성은 32.4%로 1년 전보다 2.4% 포인트 늘었고 여성도 6.3%로 1.3% 포인트 증가했으며, 전자담배를 핀다는 응답자는 23.9%로 전년보다 1.8% 포인트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자담배 인구가 늘어난 것이 흡연률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고, 같은 조사에서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향후 1개월 이내 금연 계획에 대한 응답률은 2014년 24.7%에 달했던 것에 반해, 13.1%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는 담배를 끊는 대신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도 흡연율은 높아지고 금연 의지는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자담배와 연초 모두 발암성과 생식독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많아, 금연 대신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것은 건강에 이롭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설명도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최근 흡연율 증가와 전자담배 사용 확산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흡연율 증가와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연관성을 다뤄 금연 의지 감소에 대한 원인을 전달해 흡연율 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보도는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인용해 흡연율 증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했고, 전자담배 사용이 금연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했다는 점에서는 보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이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는데도, 시청자들이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연초와 전자담배 모두 건강에 해롭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흡연자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고 생각하는지, 단순히 편의성 때문에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함께 전달되었다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보도에서는 다양한 원인과 사회적 인식 등을 포함한 보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 완화를 위한 흡연구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흡연구역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8시 뉴스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개방형 흡연구역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이 흡연시설에는 문 대신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담배연기를 정확히 길거리로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라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개방형 흡연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옷에 냄새도 덜 배고 길에서 피우는 것보다 불편함 없이 편하게 흡연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다며 이를 반기는 흡연자의 견해와 세계적 금연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서초구청은 이 같은 개방형 시설 2곳을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새로운 형태의 흡연구역 설치에 대해 전했습니다. 보도는 이러한 시설이 에어커튼을 통해 담배 연기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방지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면서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했다는 점과 시설의 장, 단점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보도의 균형이 잘 잡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목표로 설치하는 다른 지자체의 흡연구역 설치 사례와의 비교도 함께 다뤘다면 조금 더 깊이있는 보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성동구에서는 밀폐형 음압 시설을 갖춘 흡연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두 지자체의 흡연구역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 비교와 시민들의 반응 등을 함께 전달했다면 개방형과 밀폐형 흡연구역의 장단점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추후에는 이러한 흡연구역의 효과성을 더욱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정책 방향 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5. 02. 09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8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지난 4일 연합뉴스TV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을 보도했습니다. 5차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병력 투입과 정치인 체포 등의 지시와 관련해 핵심 진술을 해온 인물들로, 변론이 탄핵심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 연합뉴스 TV는 탄핵심판 5차 변론을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홍장원 전 차장은 비상계엄 발표를 통해 발령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국정원 내부와 국방부 차관에게도 확인했지만 누구도 관련 정보를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종료 후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계엄 관련 지시를 부인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으나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엄 모의나 계획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의 계획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지호 청장에게 체포 명단을 알려주며 위치 파악을 요청했으나 기억은 일부 다르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

방사령관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설명하면서도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며, 주요 증인들의 진술과 대통령의 반박을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법적 책임과 명령 이행의 불가피성, 계엄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권력의 행사와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사건의 전개나 핵심 쟁점에 미치는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법적 쟁점에 대한 보다 심층적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독자에게 더 명확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둘러싸고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되고, 내란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가 입건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폭력 행위를 사전 모의·선동한 혐의로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 및 운영진이 경찰에 고발되며, 사건의 확산과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의 위기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으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인 99명 중 6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가담자들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자와 배후 세력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이용자 및 운영진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폭동 가담 및 선동으로 의심되는 게시글들을 증거로 수집했다고 밝혔으며, 운영진이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사건 당시 법원 진입 경로와 경찰 배치 상황 등을 공유하며 폭력 행위를 유도하는 글들이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근본적 원칙이 도전받은 사례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와 이를 온라인에서 사전 모의·선동한 정황은 물리적, 디지털 공간 모두에서 법적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경찰이 사건 가담자들을 대거 구속하고 내란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입건하며 사건에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주자와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력 행위를 조장한 게시글과 이를 방치한 운영진에 대한 고발은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법적 규제와 책임 체계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법치주의가 물리적·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를 재검토할 계기를 제공하며, 나아

가 사법권 보호와 온라인 공간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근본 원인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더욱 거세진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압박에 국내 기업의 영향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과 3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멕시코, 중국, 캐나다, EU 제품에 대해 고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국내외 생산기지를 운영 중인 우리 기업들은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통상 질서에 대한 주요국과의 협력 및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장기적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중국, 캐나다,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우리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멕시코 등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 소통하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 등 주요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세 조치가 한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 대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관세 전쟁의 본격화에 따라 글로벌 통상 질서와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품에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 전략과 공급망 조정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은 멕시코 공장, LG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 사업장을 운영 중으로, 이들 역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글로벌 통상 질서를 뒤흔들며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가 보도한 두 기사는 국내 기업과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조정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시장의 타격 가능성과 공급망 조정, 국제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과 정부의 대응이 단기적 조정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선제적 대응책에 대한 미래 전략을 전문가를 통해 상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존의 오픈 AI 모델인 챗 GPT보다 저비용으로 개발한 중국의 인공지능 AI 모델 딥시크 출시에 경제는 물론 과학 기술분야까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AI 개발에 역점을 두었던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우려로 신규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방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AI 인재 1만 명 양성 계획을 밝히며, 서울시가 AI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사례를 언급하며, 소규모 기업도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AI 혁신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AI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정부의 대응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이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실효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도 정부가 AI 생태계 변화에 무대책이라며 경쟁력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야권은 정부에 국제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AI 기술 개발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과 우려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고성능 모델 발표는 AI 경쟁력 확보와 정책적 대응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야권과, AI 인재 양성과 혁신 도시 건설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시의 상반된 접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인재 1만 명 양성 계획이나 AI 기술 개발을 더디게 하는 R&D 예산 삭감의 문제 제기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개발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과 국제 협력 강화, 그리고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윤리적 기준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보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5. 02. 1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9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최근 벌어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놀라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연합뉴스TV에서 정리하여 보도한 내용 살펴 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아이가 흥기에 찢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는 심

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돌봄 교실 끝났음에도 학교에서 내려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자, 실종신고 후 경찰과 함께 학교 주변을 수색하여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는 40대 여교사 A씨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우울증을 앓았고, 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복직한 교사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건이 있기 전에도 학교 내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는 A씨를 수업을 맡기지 않는 등의 조치만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교사에 의해 사망한 본 사건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사건의 진상 규명이나 해결 방안 보다는 자극적인 부분에 주목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특정 직군이나 질환, 용의자의 성별이나 연령 등을 과도하게 강조한 보도였습니다. 반면 본 보도는 사실 위주의

사건 내용을 잘 정리하여 전하면서, 적절하게 용의자 정보를 전했습니다. 또한 용의자로 지목된 교사의 과거 이상행동 내용과 그에 따른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전했고, 아이의 실종신고와 수색 과정에 대해서도 전하여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선 사고에 대해 보도한 <뉴스3>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어선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으나, 어선 사고 사망·실종자는 오히려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 전복과 침몰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023년 78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52% 늘었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사망·실종자가 세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해수부는 맞춤형 어선안전 관리로 전복·침몰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지난해 5월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보도는 여수 대형 어선 침몰사고에 대한 긴박한 보도들이 전해지던 시점에, 어선 사고에 대한 현황을 전하여 현재 어선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함을 전하고자 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으로는, 보도 말미에 언급된 어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짚어주었다면, 현재 안전 관리 대책의 미흡함과 보완점이 명확히 드러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기사에는 보다 상세한 내용이 전달되고 있어, 방송 시간상에 따른 단신 기사로, 그 위험 전달만 강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향후에는 발표된 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여 함께 보도된다면, 보도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더 명확하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와이드>에서 보도한 또 다른 어선 사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어선 사고는 총 9,600여 건이며, 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은 420여 명에 이릅니다. 이상 기후 심화와 어민 고령화 등으로 어선 사고 가능성이 더 커진 가운데, 정부

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선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허술한 안전관리'가 꼽히는 만큼 출항 전 안전 점검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법 출항 어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멍조끼 착용만 보더라도 일일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만큼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본 보도 역시 최근 잇따라 일어난 선박 사고에 대한 뉴스들이 전해지던 가운데, 현재 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미흡함과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한 시의적절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도 제목과 자막, 앵커 멘트 등에서 원인으로 고령화 문제가 보도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보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안전관리 대책에 집중되어 현재 어업인 고령화 문제는 본 보도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딥시크에 대해 보도한 <뉴스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개발한 생성형 AI 딥시크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김치는 어느 나라 음식이냐는 질문에 한국어로 물으면 한국, 중국어로 물으면 중국이라 답합니다. 한반도 동북공정 정책엔 편향적 답변을, 천

안문 사태는 침묵을 택합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딥시크

를 잘 사용하려면 이름, 생년월일 같은 신상정보는 물론 인터넷 IP 주소와 고유 장치 식별자, 키 입력 패턴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딥시크는 광고주나 협력사들에게 활동 정보도 공유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면서 딥시크 신규 사용자는 지난 1월 28일 하루 17만 건 이상이었지만 지난 2월 4일엔 8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딥시크가 오픈소스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점들을 수정해 활용할 수 있는 점은 강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1월에 출시된 중국 개발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는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습니다. 때문에 출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차단했다는 것은, 많은 국내 이용자들의 우려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과거 챗GPT 역시 개인정보 수집 우려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해당 서비스를 차단한 기관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도는 이러한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짚어낸 보도였습니다. 정보의 신뢰성, 개인정보 보안 등의 문제를 정리하고, 특히 개인정보의 경우 일반적인 신상정보 외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도 전달하여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 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25개월 된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인에게도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먹이고, 소주를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이가 친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보도에서 알 수 있듯, 친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사망이었으나, 제목이 다소 자극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이는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방치된 후 사망하였으나, 제목에서는 불닭소스와 소

주를 먹여서 사망한 것처럼 기재되었습니다. 학대 과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실임은 분명하나, 단신 보도인만큼 보다 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사망 사건에 대해 전한 <뉴스 1번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한 50대 조선족 여성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90대 환자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환자는 폭행당한 후 병사 진단을 받고 숨졌는데 유족들은 간병인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 역시 제목에서 사건을 전달하는데

있어 정보 전달보다는 주목을 끌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의 출신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려면, 본 사건과 출신지와의 연관성이 덧붙여져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조선족이란 단어는 지난 2010년에 국립국어원이 차별 및 편견이 담긴 말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조선족'이라는 말은 중국에 있는 여러 개의 소수 민족 중 우리 겨레를 다른 민족과 구분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은 말로 재중동포를 제안했기에 향후 보도에서는 사용 여부를 논의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5. 02. 2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9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인천의 송도국제도시 분구론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송도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송도를 연수구에서 분리해 특별자치구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약이 쏟아졌는데, 최근 이를 두고 기초자치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분구 논란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로 분류되는 송도동 인구는 21만 명으로 이는 연수구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 불편 등의 이유로 분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역구 정일영 국회의원은 송도동을 특별자치구로 분리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특별법의 현실성과 정치적 수단이 되지 말아야 하며,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법안을 발의한 정일영 의원과 송도 주민단체들은 연수구청장의 의견을 비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도는 분구에 찬성은 하지만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구청장의 입장을 덧붙이며 상황 진화에 나선 것으로 전했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송도국제도시 분구 문제를 놓고 지역 정치인 간의 갈등 상황을 전했는데,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지역 사회의 현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다뤄 시청자들이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는 지역 정치인의 갈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연수구청장의 주장과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행정구역 실무편람 등의 자료를 통해 현실성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분석이 다소 부족해 시청자들이 분구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정치인 외에도 관련 전문가

들의 견해를 덧붙였다면 이 사안을 더욱 깊이있게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더욱 분석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담은 내용을 제공해주길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이 악용되어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성착취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른바 목사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습니다. 지난 15일, 토요와이드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규모의 심각성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관련 협박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자 영상물 삭제와 수사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올해 예산은 32억원으로 배정되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365일 24시간 운영과 인력 증원이 어려워졌고 현재 16명의 인력이 1인당 약 1만 8천여 건을 삭제해, 지난해 30만 건을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는 디지털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재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 누적되며, 이는 기존 피해자 외에 신규 피해자까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딥페이크 등 합성물 피해자가 6년 만에 20배 급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즉각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영상삭제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고 보도는 강조했습니다. 이 보도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규모와 심각성, 그리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딥페이크 등 합성물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예산 삭감과 영상 삭제 인력 부족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이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만 집중했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나 정부 대응 방안 등이 언급되지 않아 시청자들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지원 예산 확보 방안이나 영상 삭제 인력 확충 등 대책을 짚어보고,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대응 방식을 비교했다면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추가했다면 더욱 깊이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관련보도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내용을 전달해주길 바랍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진학 지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의대 입시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교육비 증가와 특정 과목 쓸림 현상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 TV에서는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의대 쓸림 현상과 진학 지도의 변화에 대해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설문 조사 결과 서울 내 진학 지도 교사 10명 중 9명은 의대 증원에 따라 진학 지도에 변화가 생겼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의대 증원이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정 과목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다른 과목은 개설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보도는 생명과학 등을 특정 과목으로 의대에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의대 준비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쓸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시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정시 준비를 위해 자퇴를 선택하는 등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진학 교사 대부분은 학부모들이 재수나 N수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자녀의 의대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신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는 의대 정원 확대가 교육 현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진로 결정에 대한 변화와 의대 진학을 위한 경쟁 심화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입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현실적인 고민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보도는 진학지도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는 점과 입시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다뤘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보도에서는 특정 과목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실제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실제 통계자료 등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내용이 전해졌다면 보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정량적 분석과 함께 내용을 전달해주길 바랍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만 65세 이상인 고령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뉴스포커스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택시나 화물차 등을 운전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에 대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택시나 화물차 등을 운전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고령 운수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 7개 항목 중,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찾기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2개 이상 미흡 등급을 받으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위험 사고 건수가 많거나 만 75세 이상일 경우에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하며, 초기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계라면,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어 6개월마다 추적 관리가 의무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고령 운수종사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소개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유발했습니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추적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

책의 핵심 내용을 전달해 시청자들이 변화된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나 사고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면 대책의 실효성이 더욱 강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순히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는 사실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준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었다면 시청자들이 내용을 이해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내용을 전달해주길 바랍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  <b>2025년 2월 2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b></p> 	<p>일시/장면설명  <b>2025년 2월 9일 04시/                  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b></p> 
<p>일시/장면설명  <b>2025년 2월 16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b></p> 	<p>일시/장면설명  <b>2025년 2월 23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b></p> 